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

평화당 '단체장·지방의원' 거취 고민

창당 1년 반만에 공중분해 위기 신당창당·무소속·잔류 갈림길

나 무소속으로 남아 독자적인 길을 걸을지를 놓고 다수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의 민주평화당 집단 탈당으로 평화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거취 고민에 빠졌다. 평화당이 소속 국회의원 16명 중 11명이 탈당하면서 창당 1년 반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9명의 기초의원 중 이현수·최무송·선승연(북구), 하주아(남구) 의원은 탈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현수·최무송 의원은 북구갑 국회의원의 김경진 의원을 따라 무소속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이며, 선승연·하주아 의원은 대안정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안정치를 따라 당을 탈당한 후 신당 창당에 힘을 모을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을 것인지, 또는 당에 잔류해 향후 거취를 살펴볼 것인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선승연 의원은 "이대로는 안 된다. 대안정치의 의견에 동의한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택이다"며 "당원 의견 수렴, 사무실 정리 등 탈당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평화당 소속 명현관 해남군수는 13일 "이제 막 탈당선언을 했다. 아직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양일옥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에는 이르다. 기초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남 출신 김희동 전남도 의원은 "16일째 지역위원장(윤영일 국회의원)이 탈당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위원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탈당 의사를 비쳤다.

양일옥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에는 이르다. 기초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지난 12일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의 탈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는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역위원장인 만큼 황 의원과 거취를 함께할지 주목된다.

반면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평화당 소속 전남도 기초의원들은 상당수가 탈당의원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탈당한 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입당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 들어가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계가 당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대안정치 의원의 입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평화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목포·여수·순천·광양·강진·해남·진도·영암·신안 등 23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대안정치를 선택한 의원들의 지역구 소속이어서 동반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광주지역 기초의원은 동구 1명, 서구 2명, 남구 2명, 북구 4명으로 총 9명이다. 광주 광역의원 중 평화당 소속은 한 명도 없다.

지역구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원외 지역위원장이 있는 지역의 기초의원들은 탈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월 의원(동구)은 "대표 혼자 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대안정치를 따라가거

다. 원외지역이 있는 순천과 영암·무안·신안·여수를 지역구 중에서 영암과 무안, 신안지역의 기초의원들은 그동안 별도 활동을 이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최소한 5-6명 정도는 대안정치와 다른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출원기자 repo333@srb.co.kr·김성희기자

희망 담은 시나리오만 난무

또다시 시작된 정계개편

<중>예상 시나리오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의 민주평화당 탈당으로 정치권에서는 각종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붓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들은 모두 각 정치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희망성 관측이란 지적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탈당파는 물론 잔류파에게도 암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평화당을 탈당한 광주·전남지역 한 의원은 "대안이 없어 대안을 찾으려고 나간다"고 말했다.

아직은 부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현 정국에서 보는 관측이어서 향후 정국의 변화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신당 창당 후 세력 확장

대안정치는 신당을 꾸려 몸집을 키우는 것이 최대 목표다.

대안정치를 이끌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명간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창당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창당준비위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이 최대 과제다. 대안정치에 소속된 의원 대부분이 호남 의원들이라, 인재 영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호남신당'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안정치는 유 의원 외에도 박지원·전정

제3지대 신당 창당 후 세력 규합 인재 영입·창당 자금 등 과제 남아

미래당 결합 '어게인 2016' 재현 총선 겨냥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배·장병완 의원이 인재 영입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현재 유종일 전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영입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수역원에 이르는 자금도 문제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포 창당자금을 내놓을 인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3지대 신당의 미래가 밝으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창당자금을 기탁할 인사가 나타나겠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뚫고 신당을 창당하면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무소속 의원을 영입,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게인 2016' 가능성도

대안정치의 독자 신당 창당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호남계의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21대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예상보다 빨리 탈당을 해서 함께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새누리당 탈당파를 정리할 경우 대안정치와 당대당 통합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보수통합이 이뤄져야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때 통합의 방법은 당대당 통합, 흡수통합, 3

지대 신당 등이 거론된다. 만약 성공한다면 4년 전 국민의당 식구들이 다시 만나 '어게인 2016'을 외칠 것으로 보인다.

탈당한 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입당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 들어가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계가 당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대안정치 의원의 입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일부(평화당) 의원들이 개별 복당한다면 현행 당헌·당규상 녹록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향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당 여부 '변수'

탈당 의원들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민주당 입당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 신당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민주당 입당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희망의 기저에는 '보수대통합'에 따라 민주당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 이 경우 민주당도 호남 현역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마감된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에 평화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당장 실행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명분과 추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치국회는 지나야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당정 '내년 예산 늘리기' 공감

확장적 재정 기초 유지키로 典, 510조~530조 요구도 日 대응 예산 발굴 '과감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내년 예산을 510조~53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키로 했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도 2조원+α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하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운영키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성과 시급성을 반영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를 강하게 주문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510조~530조원까지 키울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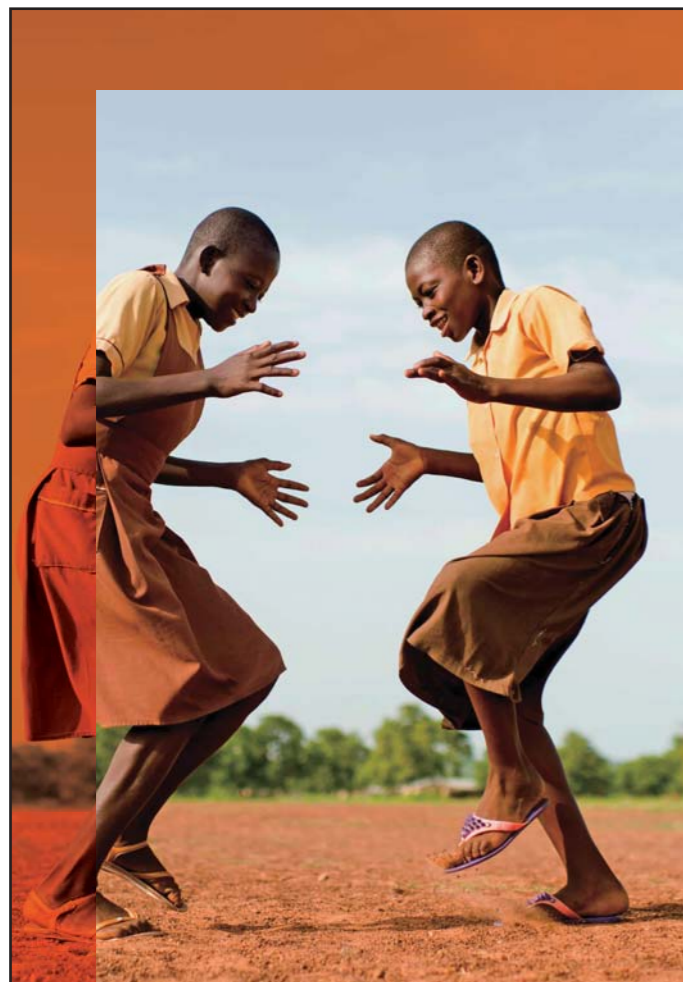
이는 469조6천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8.6~12.9%까지 증가한 것이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인 498조7천억원보다도 2.3~6.3%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당국인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예산만 늘리면 뭐하나. 실제 집행이 잘되는 게 중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면서 1조원+α를 2조원+α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변혁의 첫걸음 인권교육의 힘

2019.8.28 - 9.1

OPEN 10:00-21:00 (08.28은 14:00 이후 관람가능)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열린홀

인권교육 특별展
인권을 향한 탐구, 다름에 대한 이해

- | 주최 | Soka Gakkai International | HRE | NGO WORKING GROUP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LEARNING
- | 주관 | 한국SGI | 후원 | 광주광역시의회 | NEWSIS | 무등일보 | 중앙통신소속 | FACO | 한국기자협회 | PEN